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4월 소매판매 1.7% 감소
- 이 슈 : (경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산업) 규제와 경제성장

■ 노후생활

- 테 마 :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 세 심 록 :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 복 리 뷰 :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 동향

○ 4월 소매판매 1.7% 감소

-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투자는 증가하였지만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

- **생산:** 광공업생산은 금속가공(-6.6%)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10.6%), 화학제품(3.4%)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업(-1.8%), 예술·스포츠·여가업(-11.6%) 등이 줄어 전월대비 1.0% 감소
- **소비:** 소매판매는 내구재(-0.3%), 준내구재(-3.0%) 및 비내구재(-1.9%) 소비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1.7% 감소
- **투자:** 설비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6% 증가. 건설기성은 주거용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6.9% 증가

○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연율 기준) -1.0%로 하향 수정

-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재고감소에 따른 효과로 일시적 성장부진을 보였으나, 고용 및 주택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

- **GDP 성장률 추이:** 미국의 2014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잠정치 0.1%에서 -1.0%로 하향 수정됨(연율 기준). 이는 2011년 4분기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으로, 미국 상무부는 재고 감소에 기인한 일시적 성장 부진으로 해석
- **고용 현황:** 지난주(5.24 마감) 신규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전주대비 2.7만 명 감소한 30만 명이고, 4주 이동평균은 2007년 8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
- **주택 시장:** 4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3.4%)대비 0.4% 증가하였고, 1분기 건설대출 잔액은 전분기대비 2.1% 증가한 2,143억 달러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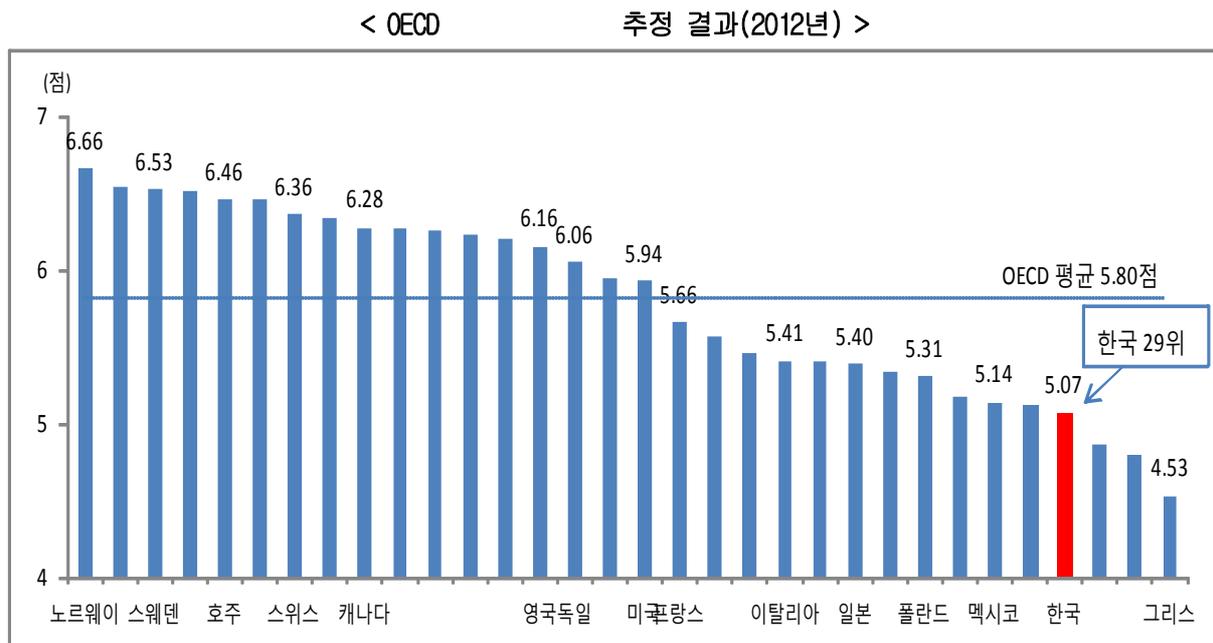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16	5/30
실물 지표	GDP성장률(%)	2.3	3.0	1.1	0.9	0.9	-	-	-		
	제조업생산(%)	0.7	-1.6	0.1	1.8	0.7	4.1	2.7	2.5		
	소비자물가(%)	2.2	1.3	1.4	1.1	1.1	1.0	1.3	1.5	-	
	실업률(%)	3.2	3.1	3.0	2.8	4.0	4.5	3.9	3.9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37.8	248.4	151.3	45.0	73.5	71.2		
금융 지표	국고채(3년)(%)	3.13	2.79	3.01	2.90	2.87	2.85	2.87	2.88	2.85	2.83
	원/달러(원)	1,126.8	1,095.0	1,112.2	1,062.1	1,069.0	1,071.3	1,070.9	1,044.6	1,025.3	1,024.0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17.7	2,009.3	1,946.1	1,937.3	1,952.4	1,991.2	1,973.7	2,010.0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5/19~5/30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OECD 비교를 통해 본 사회자본의 현황과 시사점 1)
 - 공적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사회자본지수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사적 사회자본(15개 지표)과 공적 사회자본(15개 지표)으로 구분되며, 사적 사회자본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로, 공적 사회자본은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등과 같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산출방법은 만점을 10으로 하여 모든 개별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2개국이다.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사회자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으로 OECD 32개국(이하, OECD) 평균 5.80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2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터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14-21호 (2014. 05. 23.) 에서 발췌 요약.

둘째, 한국 사회자본은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 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인다. 셋째,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공적 신뢰 부문의 순위가 31위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넷째,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사적 배려 부문이 낮은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적 신뢰 부문도 역시 취약한 편인데,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참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공적 참여 부문이 사회자본 6개 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 참여 부문의 점수는 G7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사적 참여 부문 역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는데, 사적 참여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자본 요소 가운데 강점이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전반의 소통 원활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내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복잡한 정책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부내 정책추진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장후석 연구위원 (2072-6234, chahus@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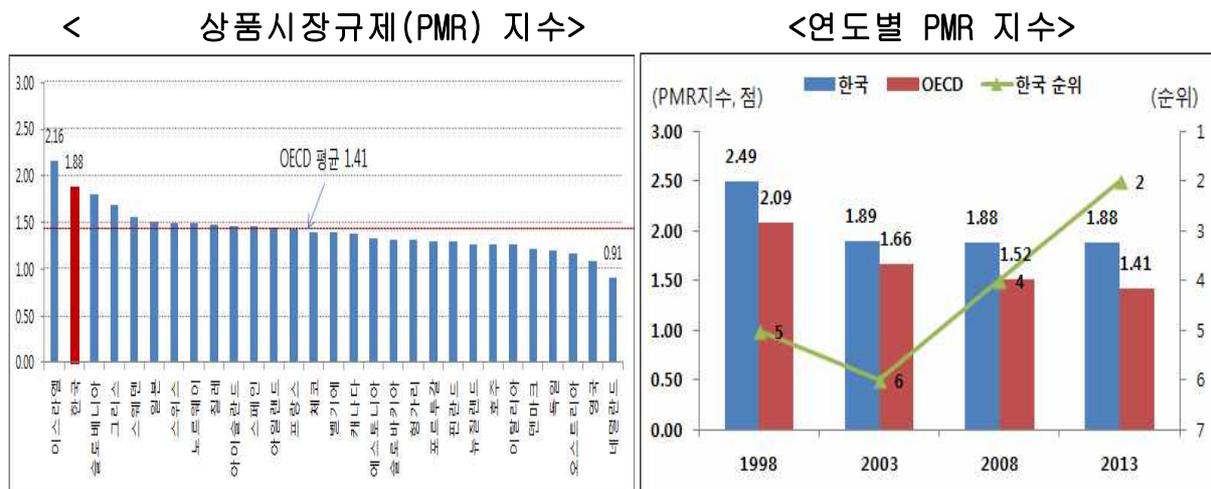
고승연 연구위원 (2072-6308, yeon@hri.co.kr)

□ 이슈 : (산업) 규제와 성장²⁾

- OECD 수준 상품시장규제 개혁時 성장률 0.3%p 향상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였으나, 위기 이후(2008~2013년) 3.5% 수준으로 급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25위까지 하락했다. OECD는 기업의 활동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상품시장규제, PMR)지수를 통해, 주로 어떤 분야의 규제가 문제인지,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6점 만점에 2013년 1.88점으로 1998년(2.49점)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의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짐에 따라 상대적 순위는 1998년 5위에서 2013년 2위로 더 올라갔다. 그리고 3가지 분야별로 보면, 특히 '무역투자 장벽' 관련 규제지수가 1.30(1위)으로서, OECD회원국 중 규제가 가장 강했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는 1998년 15위에서 2013년 5위로, '기업 활동에의 장벽' 역시 1998년 15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우리나라 규제 순위가 2위로 올라가는데 기여했다.



자료 : OECD (PMR Index)
 주 : 1) 0=가장 약한 규제, 6=가장 강한 규제
 2) 2013년 기준

자료 : OECD (PMR Index)
 주 : 1) 0=가장 약한 규제, 6=가장 강한 규제
 2) 순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규제 강함

2)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규제와 성장” 14-21호 (2014. 05. 21) 에서 발췌 요약.

아울러, 7가지 세부 지표별로 보면, '기업경영에의 간섭' 관련 PMR 지수가 2.28(3위)로서 OECD평균 1.58에 비해 크게 높았고, 진입장벽 등을 통한 '기득권 보호' 관련 PMR 지수도 1.76(2위)으로 OECD평균 1.25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관세와 FDI 규제 등 '공개된 무역투자 장벽' 관련 PMR 지수가 1.68(1위)로서 OECD 평균(0.2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위의 정성적 분석에 더해서, 규제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분석을 추가해 보았다. Barro (1991)의 경제성장 모델에 기초한 Wöfl, A. et al.(2010)의 모델을 응용해서,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상품시장규제(PMR)는 1인당 GDP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MR 규제가 OECD평균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도에 명목기준으로 0.3%p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7가지 세부 지표를 대입하여 계량분석을 해본 결과, '기업경영에의 간섭', '기득권 보호', '공개적 무역투자 장벽' 등 3가지 지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1인당 GDP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계량분석 결과가 다르지 않으며, 향후 정부가 어느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하락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가격통제 등 기업경영 관련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서비스업종에의 진입 장벽과 기득권 보호를 최소화하며, 관세 장벽과 FDI 규제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김동열 정책연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 테마 :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 요약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뿐인데 그 중 독일만이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게 유지되고 국가 경쟁력도 상승함.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은 살펴보면, 노동 투입측면에서는 우선 고용·연금 개혁 지속으로 고령자·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도 실시함.

자본 투입 측면에서는 투자 여력이 높게 유지됐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증가했으며 생산성 측면은 R&D 투자 확대와 투자 환경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시켰음.

한편, 정부도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동시에 달성하였고 고령화를 성장 동력화하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를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늘려나가고 있음.

독일의 고령화 대응 경험에서 볼 때 한국도 투입 부문에서는 고령자와 여성의 활용 제고, 해외전문인력 유입 방안 마련,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업훈련 다양화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함.

아울러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한국형 실버 경제' 추진이 요구되며 정부 부문은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및 조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 내야 함.

□ 독일 고령화에도 경쟁력 상승

○ 독일은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성장잠재력이 높게 유지되면서 차별화

-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뿐임

- . 일본의 고령화(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는 2013년 기준 25.1%(OECD 평균, 15.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21.1%로 2위를 기록
- . 이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고령 사회³⁾에, 2000년대 중후반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

³⁾ UN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은 고령 사회가 1972~2008년이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985년까지 고령화 비중이 하락하면서 독일 정부 기관 및 연구논문에서는 1985년을 고령 사회의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음.

- 독일은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경제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고령 사회 평균 2.1%로 일본 1.1%, 이탈리아 1.7%에 비해 높았고,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평균 1.9%(2009년 제외)로 일본 1.4%, 이탈리아 -0.6%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유지
- 독일은 초고령 사회 이후 국가 경쟁력도 상승하면서 일본, 이탈리아와는 차별화
 - . IMD에 따르면 독일의 국가 경쟁력은 1997년 16위에서 2013년 9위로 상승했지만 일본은 17위에서 24위, 이탈리아도 39위에서 44위로 떨어졌음
 - . 특히, 빠른 고령화가 일본에는 장기 불황, 이탈리아는 재정위기 원인으로 작용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 >

(%, 연도)

< 고령 단계별 경제 성장률 >

(%)

	고령화 정도 2013년	고령 단계별 기간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금융위기 제외
		고령화 사회 (7%~)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					
독일	21.1	~1984	1985~2007	2008~	독일	-	2.1	0.7	1.9
이탈리아	21.1	~1987	1988~2007	2008~	이탈리아	-	1.7	-1.4	-0.6
일본	25.1	1970~1994	1995~2005	2006~	일본	3.8	1.1	0.6	1.4

자료 : UN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분.
주 : 고령화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

자료 : IMF, 세계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금융위기 제외는 2009년을 뺀 평균임.

○ 초고령 사회 진입에도 독일의 재정 건전성과 대외 경쟁력은 오히려 상승

-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초고령 사회 들어 개선됐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낮았음
 - . 독일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고령 사회 -2.9%에서 초고령 사회 -1.3%로 개선된 반면, 일본은 -6.0%에서 -7.1%로, 이탈리아도 -2.9%에서 -3.7%로 상승
 - . 독일은 GDP 대비 국가부채도 고령 사회 평균 57.8%에서 77.1%로 낮게 유지됐지만 일본은 142.0%에서 212.2%로, 이탈리아도 107.3%에서 120.3%로 급등
- 독일은 자동차, 화학, 일반 기계 등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2006년 무역 2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경쟁력도 높게 유지
 - . 독일의 무역규모는 1995년 987억 달러에서 2013년 2.6조 달러 연평균 5.6%증가한 반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동기간 연평균 3.9%, 4.6% 증가함. 특히 이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독일과의 격차가 확대
 - . 독일은 1995~2013년 평균 경제성장률(2009년 제외)이 1.7%인데 내수 기여도뿐만 아니라 순수출의 기여도도 0.7%p로 일본, 이탈리아에 비해 높았음

- 이에 독일이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경쟁력을 높인 비결을 다른 초고령 국가인 일본, 이탈리아와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고령 단계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
(기간 평균, %/GDP)

구분	국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재정수지	독일	-2.9	-1.3
	이탈리아	-2.9	-3.7
	일본	-6.0	-7.1
국가부채	독일	57.8	77.1
	이탈리아	107.3	120.3
	일본	142.0	212.2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독일은 통일로 인한 데이터 분절로 고령 사회가 1991~2007년 평균임.

< 경제 성장에 대한 내·외수 기여도 >



자료 : OECD.
주 : 1)1995~2013년 평균이며, 금융위기였던 2009년은 제외.
2)일본은 2012년까지 평균임.

□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 (비교 방법) 독일의 고령화 대응 방안을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 및 정부로 구분하여 고령화 단계별로 일본, 이탈리아와 비교

- 초고령 사회 3개국을 노동 투입(인구 유입, 고용), 자본 투입(투자 여력, 투자 유입), 생산성(기술, 제도) 및 정부(복지 공급, 수요 창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

< 고령화 대응방안 비교 >

대구분	소구분	비교 지표
노동 투입	고용	- 고용률, 성/연령별 고용률
	인구유입	- 이민자 비중, 이민 정책
자본 투입	투자 여력	- 가계 저축률
	자본 유입	- 외국인 투자 유입
생산성	기술	- R&D투자 증가율
	제도	- 투자 환경 경쟁력 평가
정부	복지 공급	- 복지지출 규모, 조세 부담률
	수요 창출	- 시장 확대, 신시장 창출

○ (노동 투입) 독일은 고용 개혁과 연금 수급 시기 상향등으로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의 고용 시장 진입을 확대시켰고,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도 실시

- 독일은 고용 개혁⁴⁾을 통해 시간제 등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으로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
 - .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778만개에서 2012년 1,039만개로 꾸준히 증가
 - . 독일은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2007년에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3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한 달씩 수급 시기가 늦춰져 2023년에는 66세, 2029년 67세로 상향 예정
- 고용·연금 개혁 등으로 독일의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률은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노동력 활용이 제고됨
 - . 독일의 고용률은 고령 사회 기간 64.9%에서 초고령 사회 71.7%로 6.8%p 상승했는데 이는 이탈리아 3.1%, 일본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 특히, 독일의 고용률 상승은 하르츠 개혁을 통한 고용 유연성 제고 등으로 고령자와 여성 고용을 19.5%p, 11.2%p 높인 데 기인
- 독일은 총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13%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고학력·전문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이민 정책도 실시
 - . 독일은 총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이 2010년 13.1%로 이탈리아 7.4%, 일본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데 2013년에는 전문가 이니셔티브(The Qualified Professionals Initiative) 정책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은퇴 및 연금 수급 개혁 >

	연금 수급 나이	비고
독일	65세 (2007년)	-2007년 63세→65세로 상향 -2023년 66세, 2029년 67세로 연금 수급시기 상향
이탈리아	66세 (2013년)	-여성 62~63세 남성 66세에서 2018년까지 66세로 통일 -2021년까지 67세로 상향
일본	65세 (2012년)	-2030년까지 모든 연금 개시 나이를 65세로 통일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 총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 >

(단위: 천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독일	593.6 (7.5)	899.2 (11.0)	998.1 (12.2)	1,059.8 (12.9)	1,075.8 (13.1)
이탈리아	142.8 (2.5)	172.3 (3.0)	212.2 (3.7)	306.8 (5.2)	446.3 (7.4)
일본	107.6 (0.9)	136.3 (1.1)	168.7 (1.3)	199.9 (1.6)	217.6 (1.7)

자료 : U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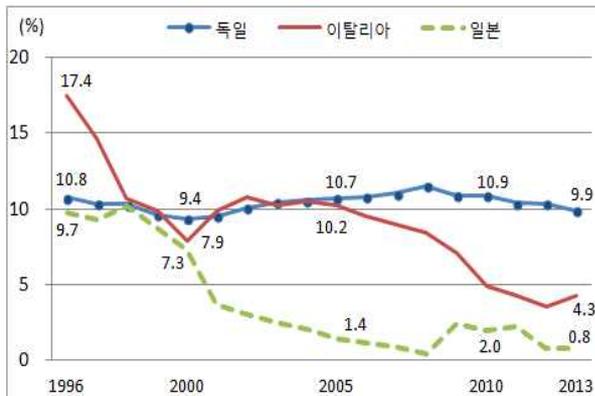
⁴⁾ 2003 당시 독일 슈뢰더 정부는 낮은 경제 성장, 높은 실업률 등을 개선하기 위한 ‘아젠다 2010’의 경제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고용 시장 개선 방안은 기간제·단시간 근로 조건 및 해고보호법의 적용 범위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했고 고용 유형 다변화, 직업 훈련 과정 개선 등도 포함.

주 : () 는 총 인구 중 비중임.

○ (자본 투입) 독일은 고령화에도 가계 및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게 유지됐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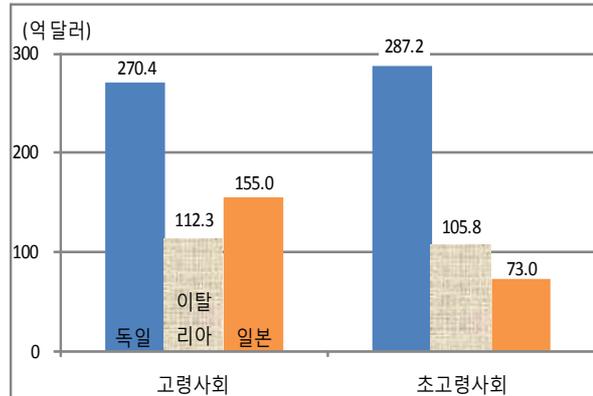
- 독일은 투자 자본이 되는 가계의 저축률이 높게 유지⁵⁾됐고 기업의 자본도 확충되면서 안정된 투자 여력을 확보
 - . 독일의 가계 순 저축률은 초고령 사회 후에도 9~10%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2000년 이후 급락하며 2013년 기준 0.8%, 4.3%를 기록
 - . 독일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율도 2000년 19.0%에서 2012년 27.5%로 8.5%p 높아지면서 장기적 관점의 안정된 투자 여력을 확보
- 독일은 유럽 내 최대 시장이며 제조업과 R&D의 경쟁력 등도 꾸준히 제고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
 - . 독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금액은 고령 사회 평균 270.4억 달러에서 초고령 사회 287.2억 달러로 6.2% 증가했지만 이탈리아는 112.3억 달러에서 105.8억 달러로 5.7%, 일본도 155.0억 달러에서 73.0억 달러로 52.9% 감소

< 가계 순 저축률 추이 >



자료 : OECD.
주 : 가계의 순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임.

< 고령 단계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2년까지 기간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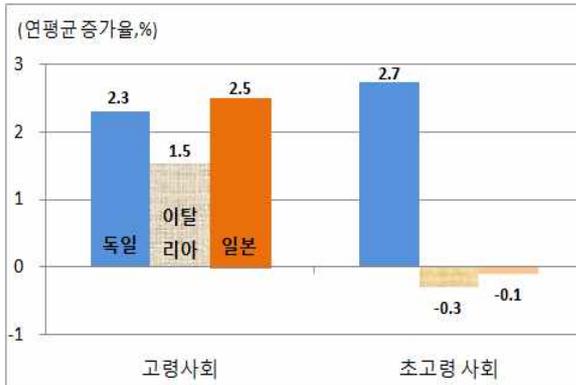
○ (생산성) 독일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R&D, 인력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투자 환경 등 제도도 개선

- 독일은 R&D와 인력 교육에 대한 투자가 초고령 사회에도 꾸준히 확대
 - . 독일의 R&D 투자는 고령 사회 연평균 2.3% 증가했고 초고령 사회는 2.7%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일본은 2.5%에서 -0.1%, 이탈리아도 1.5%에서 -0.3%로 감소
 - . 독일은 2003년 고용 개혁을 통해 노동청의 현장 실습형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

⁵⁾ Mackinsey(2005), KDI(2006), (2009) 등은 고령화가 피부양인구 비중의 증가 등으로 저축률 하락과 투자 감소로 연결된다고 분석.

- 독일은 법인세률을 인하하고 인프라, 혁신 능력 등 투자 환경의 경쟁력도 높게 유지
 - . 독일은 2007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률을 39%에서 29%대로 낮췄고 고용보험료율도 6.5%에서 3.3%로 하향 조정 하는 등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
 - . 또한, 독일은 인프라, 혁신 능력, 인력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일본, 이탈리아 보다 투자 환경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음

< 고령 단계별 R&D 투자 증가율 >



자료 :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2년까지이며, 실질 달러 기준임.

< 투자환경 경쟁력 비교 >

	독일	이탈리아	일본
법인세	29.6%	31.4%	38%
전반적 인프라	10위 (6.2)	53위 (4.8)	14위 (6.0)
혁신 능력	3위 (5.6)	31위 (4.2)	6위 (5.6)
연구 및 인력교육 서비스 접근성	2위 (6.1)	32위 (4.8)	12위 (5.5)
금융서비스 접근성	17위 (5.7)	71위 (4.5)	31위 (5.3)

자료 : WEF, KPMG Global Tax.
주 : ()는 경쟁력 지수로 1~7 범주이며, 7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의미.

○ (정부) 독일 정부는 2003년 이후 고용·연금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고, 고령화를 신시장을 창출하는 성장동력으로 인식

- 독일은 고용·연금 개혁을 통해 과도한 복지 축소, 고령자의 연금 수급 시기 분산 등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 . 독일 정부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1980년 22.1%에서 2009년 26.2%로 4.1%p 상승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동기간 12.0%p, 10.4%p 늘어남
 - . 부분별로는 독일의 고령자에 대한 GDP 대비 복지 지출은 1980년 9.7%에서 2009년 9.1%로 -0.6%p 감소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7.4%p, 5.8%p 증가
- 이에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대 이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빠른 고령화에도 80년대 이후 30% 중반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1980년 29.7%에서 2011년 44.4%로 14.7%p 급등했고 일본도 동기간 3.8%p 증가
- 또한, 독일은 고령화를 새로운 일자리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

- 실버 경제는 2005년 독일 본(Bonn)에서 유럽의 삶의 질,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자 EU차원에서 도입된 개념임
- 실버 경제는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자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예를 들어, 제조업은 고령자의 생활 편의, 건강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로봇 산업, 전자 동 자동차, 헬스 케어 등에 서비스업은 ICT와 결합을 통해 고령자에게 삶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

< 분야별 복지 지출 추이 >

(%/GDP, %p)

	전체	고령자	의료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독일	22.1→26.2 (4.1)	9.7→9.1 (-0.6)	6.6→8.6 (2.0)	2.0→2.1 (0.1)	0.5→1.0 (0.5)
이탈리아	18.0→28.4 (10.4)	7.2→13.0 (5.8)	5.5→7.4 (1.9)	1.1→1.6 (0.5)	0.2→0.4 (0.2)
일본	10.3→22.3 (12.0)	3.0→10.4 (7.4)	4.4→7.2 (2.8)	0.5→1.0 (0.5)	0.3→0.4 (0.1)

< 실버 경제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도입	- EU 차원에서 2005년에 도입
과제	- 행복한 노후 - 고령자의 적극적 고용기회 - 고령자의 기술숙련 개발과 평생 교육 등 5대 과제
행동영역	- 고령자의 독립적 삶 지원 (, 건축, 통신 등) - 홈 베이스 서비스와 쇼핑, 건강, 금융 서비스 등

자료 : OECD.

- 주 : 1) 1980년과 2009년 GDP 대비 지출 규모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은 1990년 2009년임.
- 2) ()는 시작 시점 대비 증감임.

자료 : EU 실버 경제 네트워크.

□ 시사점

-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초고령 사회인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법을 부문별로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동 투입) 고령자,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고숙련·전문 인력의 유입 정책도 재정비
 - 고령자와 여성이 고용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공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강화
 - 또한, 해외 고숙련·전문 인력들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보완도 필요함
 - (자본 투입)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 등도 개선
 - 지출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면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저축기반이 확충되면서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을 제고될 수 있음⁶⁾

- . 또한, 국내외 투자를 꾸준히 유인할 수 있도록 세제, 인프라, 인력 및 R&D 환경,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생산성)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자·여성 등에 대한 직업훈련도 다양화**
 - . 세계 최고의 GDP 대비 R&D 지출에도 기술 경쟁력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는바 기술 이전 체계 보완, 산학연 협력 강화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함
 - . 또한, 고령자와 여성의 숙련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 훈련도 다양화해야 함
- **(新시장 창출) 고령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한국형 실버 경제' 모델을 마련**
 - . 고령 관련 일자리를 통해 고용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국내외 시장을 확보해야 함
- **(복지 체계 개선)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
 - . 일자리 복지 확대와 고령화 정도에 따른 복지 지출 규모의 확대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함
 - . 특히, 집행된 복지도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재정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 **(사회적 합의 도출)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및 적절한 조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도출도 필요**
 - . 지속 성장을 통한 재정 규모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나 공공복지 수요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고 OECD 고령 국가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격차가 큰 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설득 과정이 필요한 시점임
 - . 또한, 일자리 유지 기간이 길수록 정부의 복지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적정 은퇴 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도출도 필요함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2072-6217, chjss@hri.co.kr)

6) 여력이란 해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추가 지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잉여재원으로,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이나 투자를 뺀 것임, 한국은행, '고령화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BOK 이슈 노트, No.2013-2.

□ 세심록(洗心錄)

○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10 가지

거의 모든 세상의 일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 오늘 하루를 봐도 생각보다 아침날씨가 쌀쌀하기도 하고, 지하철이 어제보다 늦게 오기도 하고, 업무가 더디게 진행되기도 하고, 점심때 동료들과의 대화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재미있을 수 있고, 큰마음 먹고 산 비싼 커피가 가격에 비해 그저 그럴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상사로부터의 지적을 추가하면 세상은 나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조롱하면서 돌아가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각자는 정신적인 탈출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화(火)를 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높아지는 세상에 대한 불쾌감을 낮춰 평정을 찾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 단순하게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닐 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5월 5일) 미국의 인터넷 신문인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10 Things You Should Never Do When You're Angry)"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건강칼럼은 대비책을 담고 있다.

1. 분노 속에서 잠자리에 들지 말 것.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은 부정적인 감정을 보존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깨어있으면서 화를 식이는 것이 나쁜 기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2. 화가 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 것. 연구들은 화가 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위험을 무릅쓰고 그만큼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3. 화를 밖으로 쏟아내지 말 것. 화가 나면 주변의 자기물건에 대해 이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베개를 가지고 화풀이를 하면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래에 행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4. 먹는 것을 통해 화를 다스리지 말 것. 화난 상태에서 먹을 것을 찾게 될 경우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같은 채소보다는 고당도, 고지방, 고 탄수화물의 음식물에 손이 쉽게 간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육체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해 소화마저 원활화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5. 논쟁을 계속 이어나가지 말 것. 화를 불러일으킨 논쟁을 계속할 경우 나중에 후회할 애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논쟁을 계속해야 한다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도한 대로 더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6. 페이스 북과 같은 SNS를 통해 화가 난 이유와 내용을 알리지 말 것. 화가 났을 때 이를 친구나 가족 혹은 그냥 아는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떠벌인다면 나중에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7. 화가 풀리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쓰지 말 것.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이메일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굳이 써서 보내고 싶다면 먼저 문서파일로 작성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당연히 그 만큼 후회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8.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찾지 말 것. 화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종종 그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술은 충동조절 기능을 약화시켜 화를 행동으로 쉽게 표출하도록 만든다. 당연히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가 더 쉬워진다.
9. 화가 났다고 해서 혈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 것. 화를 표출한 다음 두 시간 동안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가능성이 각각 5배와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운동, 명상 등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것이 장수와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된다.
10. 화를 곱씹는 것을 피할 것. 상대가 어떻게 불공평했고 상처를 주었는지를 자꾸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목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악함으로 이르는 길이다.
 - 톨스토이(1828-1910): 러시아의 소설가

□ 북리뷰 :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⁷⁾

짐 글렌 : 미래학자, 밀레니엄 프로젝트/세계미래연구기구협의회 회장, 유엔대학교 미국위원회 이사
 오스틴 굴스비 : 시카고 경영대학원 교수, FRB 경제자문위원, 전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
 대니얼 엘트먼 : 뉴욕대 스톤스쿨 교수, 국제 문제 저널리스트, 전 이코노미스트 기자

○ 주요 내용 : 세계 석학들이 진단한 5년 후 미래 보고서. 자본주의의 한계에 맞서 새롭게 등장한 대안적 경제 질서를 살펴보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전망

- 글로벌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핵심 동인(글로벌 헤게모니, 기축통화, 인구구조와 소비시장, 중국 등 신흥국, 에너지 및 자원, 신기술)들을 선정하고, 파급 효과를 예측

- 미래를 전망하는 총 5개의 프리즘

1.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G8)와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프론티어(Frontier) 12개 국가(F12)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적 소비자층으로 부상한다.
2. 가치사슬의 혁명, 갑을 생태계가 을갑 생태계로 뒤바뀐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벤처기업이나 이업종 히든챔피언을 융합한 기업이 지배자로 등극한다.
3. 정글 자본주의는 한계에 다다르고, 시장 기능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가 각광받는다.
4. 언제든지 유로존 해체 위기는 재연될 수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나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5.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중국-일본-인도-ASEAN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는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muddling through)'.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과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재편이 불가피

⁷⁾ 글렌, 오스틴 굴스비 등 세계적 석학 50인 지음,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 펴냄,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3.11.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버트랜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